

7년전보다 낮은 공사비로 공생하라?

기사입력 2012-01-25 14:46:34 |

폰트    

정책연, 적산기관 다각화·소형공사 분리 제언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현 실적공사비 단가가 7년 전보다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공사비 산정기준의 작성 및 관리의 개선을 통한 공생 발전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달청의 2011년 하반기 기준의 실적공사비 단가는 2004년 상반기 단가와 비교해 토목 -0.22%, 건축 -2.78%, 기계 -1.23%씩 낮다. 신기술 적용에 의한 원가절감, 기존 공사비 거품 제거 등을 고려해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공사비 산정원가가 7년 전보다 낮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현 실적공사비가 건설현장과 괴리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건설공사 예가 거품을 걷어냈다면 올라야 할 낙찰률도 오히려 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자료'를 보면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교통시설 낙찰률(최저가 기준)은 2009년 71.3%에서 2010년 68.8%로 낮아졌다. 업계의 저가덤핑 영향을 고려해도 예가와 낙찰률이 동반추락한다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이를 제어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 아래 저가로 공사를 떠맡은 원도급사는 그 부담을 전가할 하도급사만을 우대하고 장기적 협력관계나 기술·공법·아이디어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현재의 폐쇄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방식을 투명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국책연구기관에 필적할 만한 건설단체 산하의 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정책연구원 등에 공사비 산정업무를 분담시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선진국들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발주기관의 견적과정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만 쓰이며 기관별로 공사특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기관의 공사비 기준을 취사선택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한 적은 공사물량, 분산된 작업장, 인력수급 애로, 짧은 공기 등의 특성을 갖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을 별도로 산정해 운용할 것을 제언했다. 현행 표준품셈에도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할증(보정계수) 근거조항이 있지만 감사를 의식한 발주기관이 적용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 왕립조사기관도 대규모 공사와 소규모 공사를 구분해 별도의 공사비 자료를 발간한다.

홍성호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이나 올해 국토부 사업계획에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 개선책이 일부 포함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의 공생발전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원하도급사간 전략적 동반관계 형성을 유도해야 하며 그 첩경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체계 수술"이라고 제언했다.